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약속

- 환경부,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와 자발적협약 체결
- 고객이 미요청 시 일회용품 제공 자제,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 보유 등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①, 5개 패스트푸드점^②, 2개 제과업체^③,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한다.

- ①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베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초콜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빵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17개)
- ②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5개)
- ③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2개)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4개 업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품을 자율적으로 감량한다는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하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주요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먼저,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감량·재활용 촉진 및 홍보 등 실천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회용컵 우선 사용 유도>

또한,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우선 사용하고,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음료가격 할인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감량 실천(캠페인)과 길거리 컵 수거함 설치 등 사회 공헌 활동도 기대된다.

* 개인 다회용컵 이용시 금액 할인, 브랜드 자체 포인트 제공,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할인 등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 활성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 한다. 그간 일부 매장들은 플라스틱 빨대만 제공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규제 품목에서 제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빨대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행동유도(넛지)형 감량 운동(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사용 후 분리배출, 재활용 강화>

마지막으로, 사용 후 매장 내에 회수된 일회용 컵 등을 분리배출하고 전문업체가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협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에 따른 자율감량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단속 위주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로 일회용품 자율감량 체계(패러다임)를 확산시키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협약식 개요.
 2. 협약문. 끝.

담당 부서	환경부 1회용품 대책 추진단	책임자	팀 장	임수영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김무연 (044-201-7414)



□ **추진배경**

-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일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자발적협약* 갱신·확대

* 기존에 별도로 체결한 협약(①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18.5.24, '20.11.26), ②제과업계('18.7.2))을 통합하고, 신규 참여 희망업체도 포함하여 협약

□ **협약식 개요**

- (시간 및 장소) '24.1.25(목) 13:30~14:10 / LW컨벤션센터(서울시 중구)

- (참석자) 환경부장관, 기후탄소실장, 협약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대표 등

* (기존) 21개 업체 → (이번 협약) 24개 업체(기존 19개, 신규 5개)

- (주요내용) 고객이 먼저 일회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노력,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보유하여 고객의 선택권 적극 보장, 플라스틱 빨대 관련 넛지형 감량캠페인 참여 등

□ **세부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30 ~ 13:35	'5	• 개회(개식선언 및 내빈 소개)	일회용품대책추진단팀장
13:35 ~ 13:40	'5	• 인사말씀	환경부장관
13:40 ~ 13:45	'5	• 향후 일회용품 정책 방향	기후탄소정책실장
13:45 ~ 13:50	'5	• 협약서 낭독	일회용품대책추진단팀장
13:50 ~ 13:52	'2	• 협약서 서명	참석자 전원
13:52 ~ 14:05	'13	• 업계 의견 청취	협약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
14:05 ~ 14:10	'5	• 단체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4:10		• 폐회 및 환송	일회용품대책추진단팀장

**환경부-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우리는 다회용컵 사용을 확산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일회용품 감량·재활용 촉진과 홍보 캠페인 등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먼저 종이컵, 빨대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개인이 가져온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음료가격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컵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일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플라스틱 빨대 제도기간에도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보유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플라스틱 빨대 제도기간에도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여 무의식적인 사용을 줄이는 넋지형 감량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기존 컵 뚜껑을 빨대 없이 음용 가능한 뚜껑으로 변경하는 등 대체품 도입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회수된 일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 (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회수·재활용량을 포함한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1.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 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1. 정부는 협약사업자의 선제적인 일회용품 감축 활동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1.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